

CESCO Food Safety NEWSLETTER

2019. January _ Vol. 121

발행처 _ (주)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

주소 _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주) 세스코 터치센터

대표번호 _ 02-2140-0288 http://cescofood.co.kr

NEWS 식품안전 주요 NEWS

겨울방학 학원가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점검

- 학원가 주변 문방구, 분식점 중심으로 실시... 유통기한, 조리시설 등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방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9년 1월 3일부터 18일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가 등 주변의 문방구, 분식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냉장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겨울철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제재와 벌칙

위반 내용	행정제재	벌칙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영업정지 15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과태료	-
보관 및 유통기준 위반	시정명령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건강진단 미 실시	과태료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2월 31일)



CESCO 세스코 터치센터 전경

세스코 식품안전서비스

세스코 식품안전위생진단 서비스

1 Step

FOOD SAFETY CONSULTANT

외식업장의 사업을 돕는 식품안전 컨설턴트가 찾아갑니다



2 Step

3,021

조리시설의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3,021가지의 기준으로 철저히 진단합니다

3 Step

UPGRADE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업장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4 Step



세스코의 다양한 업장홍보 프로그램으로 소비자가 먼저 찾는 깨끗한 맛집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배달앱 운영자이물통보 의무화등 안전관리 강화

-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책임 행정을 마련한다. 또한,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언론 홍보자료 > 보도자료) 또는 국회의안 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 의안현황 >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2월 28일)

친환경인증의 소비자 신뢰제고 방안 추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12.31. 공포)이 개정되어 '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인증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17.12.27.) 내용이 반영되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 의무화,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 사용 시 즉시 인증취소,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강화, ▲불가항력적인 오염의 처분기준 개선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분야의 기준은 강화하고 불합리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친환경인증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보완되어 '친환경인증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2월 31일)

세스코 이물분석 서비스

전문장비와 다양한 분석 기법 보유

국내 최대 유형별 전문 분석 장비와 기법으로 해당 이물의 명확한 실제 파악

- ▶ 유전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기기분석
- ▶ 해충,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이물까지 전 영역에 대한 분석 가능

		
동물성 이물 곤충, 동물사체, 모발, 분변 등	식물성 이물 탄화물, 식물조직 섬유 등	광물성 이물 금속 조각, 유리, 고무, 합성수지 등

국내 최대 30여가지 유형별 전문기법을 바탕으로 신뢰성을 확보 하는 기관

농식품부,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발표

- 35년만의 밀수매제도 실시, 품질제고 등으로 밀산업 발전기틀 마련

농식품부는 국산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국산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에 중점을 두어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현재 밀 자급률 1.7%에서 4년 후 9.9%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국산밀 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단계 품질 제고, 유통단계 품질 제고, 수요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단계 품질 제고
 - 1) 밀 품종 분야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국산밀 R&D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2년까지 빵·중화면 등에 적합한 국내 환경 적응 경질밀 유전자원을 5개 이상 개발할 계획이다.
 - 2) 밀 품질 균일성 제고를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급종 선정 및 공급방식을 기존 생산자 중심에서 수요자 참여방식으로 개선하여 국산밀의 가공·이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 3) 기존에 쌀 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되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밭식량작물(밀, 콩, 감자 등)까지 전면 확대·개편한다.
 - 4) 밀-콩, 밀-감자 등 벼 이외의 소득작물과 연계된 밀 작부체계 보급을 확대하고, 타작물 재배 단지화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생산자단체·가공유통업체 간 MOU 체결을 통해 학교급식, 지역 음식점 등 국산밀 판로 확대를 추진하는 충청남도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남·전북 등 밀 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밀 생산-가공·유통-소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2. 유통단계 품질 제고
 - 1) '19년부터 기존의 외관상 품위 규격 외에 가공용도별 단백질 수준 및 품종 순도 등이 포함된 밀 품질등급 규격을 신설하고, 품종 및 품질 등급별 10~20% 이상 차등된 가격에 정부수매하여 국산밀 품질 제고를 유도한다.
 - 2) 수확 후 건조·저장·제분·유통단계에서 철저히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밀 전문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시설을 지원하고, 기 개발된 '국산밀 수확후 관리시설 표준모델' 보급도 확대한다.
3. 수요기반 확대
 - 1) 밀 의무자조금 전환('19 목표) 및 국산밀 이용 음식점에 대한 인증제('20~, 생산자단체 주관) 추진, 하나로마트 내 국산밀 PB제품 생산·판매 확대 및 aT 사이버거래소와 연계할 계획이다.
 - 2) 청밀·발아밀 등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국산밀제품 R&D, 제품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 3) '19년부터 신규로 밀쌀 군납 추진, 밀쌀 학교 시범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학교급식에 국산밀제품 사용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심의 로컬푸드 이용 확대 등을 통해 국산밀 대량 수요처를 확대한다.
4. 제도 개선
 - 1) 밀 수입 자유화에 따라 '84년 폐지된 밀 수매비축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도입한다.('19년 신규, 100억원, 1만톤 수준, '17년 생산량 37천톤의 27%)
 - 2) 국내 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밀산업육성법 제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이 밀 수급안정 및 고품질 밀 생산 유도를 통해 국산밀 생산·소비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산자 및 관련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세부과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2월 27일)



세스코 표시컨설팅 서비스

비용

짙은 법령 변경에 따른
인쇄 등판 변경 최소화 유도
이슈로 인한 불용&회수
제품 최소화

인력(역량) 관리

짙은 인력 변화에 따른
관리 역량 유지
표시 관리 인력의
업무 효율성 증대

마케팅

최소 표시사항 적용으로
마케팅포인트 면적 증가
디자인 통일성 향상

【 표시 검증 】

- 표시사항, 셀링포인트
- 솔루션 제공

【 현장 표시 검증 】

- 표시사항, 셀링포인트
- 현장방문, 일당 10제품

【 표시 작성 】

- 표시사항, 영양성분표
작성 및 솔루션 제공

【 Online/광고물 검증 】

- 셀링포인트/체험기/댓글
등 허위,과대 광고 검증

제품 출시 처음부터 끝까지 법규 기반의 체계적인 법규 리스크 관리

'19년 1월 ~ 2월 점검(수거검사포함) 일정

점검명	점검 대상	점검기간
○ 설 대비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점검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수산물(제수용품 등 제조판매)	1.14~1.18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점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7~2.20
○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 점검	영.유아식, 체중조절용식품, 영유아곡류조제식, 환자용식품 등	2.18~2.22
○ 상반기 탁·약주 제조업체 점검	탁·약주 제조업체	2.18~2.22
○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점검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2.25~2.27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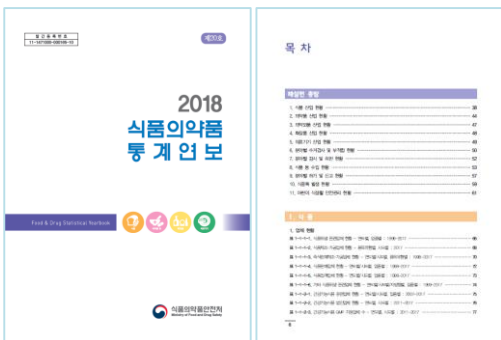
🔧 식품산업 NEWS

식약처, 2018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쉽게 자료를 이용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식의약품 안전관리 수준과 산업현황 등 다양한 통계를 담은 '2018 식품의약품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018 식품의약품 통계연보」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9개 대분류, 56개 중분류, 362개 통계표를 수록하였다.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은 ▲ 식품산업현황 ▲ 의약품 산업현황 ▲ 의약외품산업현황 ▲ 화장품산업현황 ▲ 의료기기산업현황 ▲ 분야별 수거검사 및 부적합 현황 ▲ 분야별 감시 및 위반현황 ▲ 식품 등 수입현황 ▲ 분야별 허가 및 신고 현황 ▲ 식중독발생 현황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세스코 식품안전' 사이트(▶ [자료 다운로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2월 21일)



HACCP 의무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0호) cescoacademy.co.kr

HACCP 정기 과정 (1/9, 22)

- 년 1회 HACCP 팀장이 반드시 이수 (법정 교육)
- 효율적인 HACCP 사후관리 방법, 요령 습득

HACCP 경영자 과정 (1/22, 2/19)

- HACCP 추진 시 최고경영자의 역할 인식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참석

HACCP 팀장 과정 (1/10~11, 23~24)

- 신규로 HACCP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 교육
- '세스코 시뮬레이션센터'에서 현장 실습까지 한번에!



식품 전문 교육



표시 연관 법규와 식품표시 실습(1/25)

- 표시 연관 법령을 한눈에 소개 (법, 공전, 기타 법령)
- 사례 위주로 표시기준을 이해하고 원산지, 영양성분표, 표시사항 작성, 제품 표시 분석, 오류사항 찾기 실습도!~



위생용품 위생 교육

위생용품 위생교육_신규/보수과정(1/17)

- 위생용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 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 대상 법정 의무 교육

2019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19년 식품안전정책 주요 사항)

Copyright©. CESCO. All Rights Reserved.  CESCO
세스코

“2019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Table of Content

1. '19년 식품안전관리 목표 및 주요 시책 (vol.121)
2.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vol. 122)
3. 주요 법령 변화 (vol. 123)
4. 연간 단속 계획과 주요 결과 (vol. 124)
5. 기타 참고사항

“ '19년 식품안전 정책 추진 전략 ”

식품안전관리 정책 추진 전략

비전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책임지는 국가 구현”

목표

“미래.환경변화 대비 식품안전 기반 조성”

핵심 전략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불시평가 확대 및 one-strike out제 강화 ○ 해외제조업소 현지 실사 및 통관검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비식용 수산물 특별위생관리식품 지정 · 운영 ○ 아동급식 가맹 음식점 위생안전시설 개선 사업 추진 ○ 국가 잔류물질프로그램의 제도화 및 안전한 계란 유통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실시, 계란 출하전 검사 강화
	체계적이고 끊임없는 유통관리 환경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간편식, 배달앱, 온라인 판매제품 등 소비트렌드 반영 검사 강화 ○ 면세점 내 판매식품 및 수입식품 전문 판매점 안전관리 강화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급식의 공공성 제고 ○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및 이력추적대상 품목 확대
	안전한 먹을거리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자에게 실증 책임을 부여하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시행 ○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식품안전정보 지속 제공 ○ 식중독 원인 미생물 위해평가 및 식중독 원인체 유전자 DB 확보

8

“ '19년 식품안전 정책 추진 전략 ”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변경사항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3월~)
- 즉석밥 · 국 등 즉석섭취식품 등의 HACCP 의무적용을 차질없이 추진 (지속)
- 임산부 · 환자용 식품에 이력추적 적용 확대 (지속)
- 난각 표시기준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계란의 선별, 세척 유통을 위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식용란수집판매업체에 자가품질검사 의무 부여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사항

- 기획점점 및 위생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
 - 온라인 전용 슈퍼마켓, 무인점포, 프리마켓 등
 - PC방, 스크린골프장 등 위생취약분야 조리시설
- 식용란 농장 출하 전 잔류물질(농약) 검사 강화
-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유통 단계까지 검사 대상 확대

국회 지적 등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 HACCP 전면 불시 평가 추진 등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 정기·조사평가 불시실시, 법령위반 업체 즉시 재평가 실시 등
-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 급식소 등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직접 납품하는 제조업체 등 점검 강화
 - 점검 대상 확대 및 사용 식재료, 완제품(간식류) 등 수거 · 검사 강화
- 휴게음식점, 제과점 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적용대상 확대
- 식품접객업체 조리음식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물의 재사용 기준 명확화 및 관리 강화
 - (종전) 손님이 먹고 남은 → (개정) 손님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된
-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개인 휴대반입식품, 면세점 판매제품 등 수입 식품 안전관리 강화

9